"진상규명" 대의 한마음…서로 양보하며 갈등 줄여나갔다

5·18 43주년 흔들리는 대동정신

〈3〉 타지역 분쟁 해결 사례 보니

여순사건유족회 합동추모식 개최지 갈등 빚다 매년 순회 개최 합의
제주 4·3유족회와 경우회, 10년 '화해 캠페인' 노력 끝에 교류 넓혀
중요한 건 소통과 협치…국민 설득해 공감대 만들고 숙성 과정 필요

최근 광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반목이 심해지면서 갈등을 해소할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여수·순천 10·19사건,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단체들의 갈등은 늘 있었으나, 이들은 '진상규명'이란 명제 아래 서로 양보하며 갈등을 줄여나갔다.

지난 2021년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남 6개 시·군 여순사건 유족회는 합동추모식 개최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기존에는 전남도가 주최하는 시·군 순회 합동 위령제와 여수시에서 열리는 합동 추념식 등 각 지역별로 별도의 추념식을 열었는데,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합동 추념식을 열게 되면서다.

당시 각 유족회는 저마다 자신이 여순사건 최대 피해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유족회는 "최초 발발지이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수에서 매년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구례유족회는 "가장 오랜 시간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구례였으므로 구례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시·군 유족회도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수나 구례에서 합동추념식을 열면 안된다"며 잇따라 반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서로 양보하며 '소통과 협치'를 선택했다. 매년 추념식에 앞서 전국 유족회장들과 회의를 열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추념식을 열기로 정한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각 지역 유족회를 해산하고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을 발족하면서 정례화됐다.

그 결과 합동추념식은 지난 2021년에는 여수에서, 지난해에는 광양에서 열렸다. 총연합회는 지난 4월 7일 전국 유족 대표들을 소집해 올해 추념식 개최지를 고흥군으로 결정했다. 고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추념식이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타 지역 유족들도 지지 목소리를 보낸 것이다.

이규종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은 "유족들이 벌써 80~90대를 넘어선 시점에서 지금은 내부 갈등을 키우기보다 '진상규명'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며 "자기 시·군의 피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유족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제주 4·3희생자유족회는 60여년 동안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 온 제주도재향경우회와 '조건 없는 화해'를 선언했다.

정부 공인 4·3진상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족회와 경우회 회원들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이 공식화되면서다. 4·3이 '제주만의 사건'이 아닌 '미·소 냉전 정세에 휘말린 세계적인 사건'으로 확인된 점도 화해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다.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4·3사건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면서 화해에 대한 공감대도 더욱 커졌다.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따르면 이후로도 10년에 걸친 노력을 쏟은 뒤에야 화해 선언이 이뤄질 수 있었다. 재단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 내에서 크고 작은 '화해 캠페인'을 벌였다. 대학과 방송 등 곳곳에서 '제주 4·3 화해와 상생'을 주제로 토론회가 잇따랐으며 유족회와 경우회 임원들이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면서 화해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유족회와 경우회는 화해 선언 이후로도 매년 군·경 충혼묘지와 4·3평화공원을 합동 참배하는 등 교류 폭을 넓혀갔다.

물론 이후로도 크고 작은 잡음은 있었다. 지난 2017년 김영중 제주경우회장이 "4·3 부적격 희생자의 위패를 4·3평화공원에서 내려야 한다"는 등 왜곡발언을 하고, 지난달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추념식에서는 보수단체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가 "4·3은 공산폭동"이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갈등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미 4·3진상조사보고서로 사건 전말이 공식화된 만큼 더 이상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양조훈 이사장은 "수십년 동안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써 왔던 단체들이 화해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수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이 다방면에서 세를 떨치는 요즘에 5·18을 비롯한 전국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사적지 탐방 투어 광주시 동구청이 운영하는 '5·18사적지 탐방 투어'에 참가한 여행객들이 11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5·18 체험교육 강화

답사·공연 등 전국·세계화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5월 정신 계승을 위해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교육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5·18 주간을 맞아 5·18 사적지 답사,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사이버 5·18기념관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 활동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5·18 문화예술공연을 확대·운영한다.

내실있는 5·18민주화운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학교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안내한다.

전국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5·18기념재단과 함께 학교 공간을 활용한 교육용 전시자료를 지원하는 '오월 서가'도 운영한다.

전국에서 500명의 교원을 초청해 5·18 교육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전국 교원 직무연수도 진행한다.

전국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5·18 청소년 현장 체험 캠프와 오월강사단 파견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18 인정도서 6000권과 함께 5·18 교육자료 꾸러미 3000명분을 보급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과 함께 개발한 체험 중심 5·18 교육자료를 전국에 배포해 전국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5·18 홍보단 '푸른새'를 통해 영상, 공연예술, 영어 홍보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세계민주시민의 보편적 가치"라며 "올해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5·18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교육과 세계화를 추진해 광주정신이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납품 비리' 판결로 본 교육청 공무원 낀 '골프 모임'

청탁 온상…납품액 60%까지 알선수수료 챙겨

전남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들이 끼어 있는 사모임이 청탁의 온상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줄곧 '청렴 교육 행정'을 표방해 왔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실상은 골프모임 등의 사모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공무원들이 알선·청탁을 주로 받아온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A씨(58)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2억1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초부터 2018년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특정업체 제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업체로부터 62차례에 걸쳐 12억5942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900여만원 상당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전체 납품금액의 60%에 달하는 알선수수료(2300여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여년간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관급 자재를 납품한 A씨는 공무원들과 '우정회'라는 골프모임을 통해 친분을 유지하며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조달업무의 공정성,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개월 넘게 구속됐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비슷한 시기 활동하다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알선 브로커 B씨도 사모임을 이용했다.

B씨도 도교육청 공무원들과 골프 모임인 '장미클럽', '녹우회'를 이용했다. 또 친목 모임인 '육인회'에 소속된 공무원들과 제주는 물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주기적으로 식사 모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여행 경비 등을 선결제하거나 회사 명의 리조트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B씨는 제품 납품을 가능하게 한 대가로 납품가액의 45%까지 받아챙겼다. 한편, 뇌물공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